

현지생산·포트폴리오 다변화… 韓기업 수출 ‘탈미’ 속도

철강·배터리, 인도·유럽 투자 확대
FTA·현지생산 병행 수출 다변화
中과 경쟁격화, 공급망 재편도 과제
전문가 “脫미국, 불가피 전략 전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초고율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산업계는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으로 수출선을 넓히고,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등 돌과구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업계의 전략적 접근과 함께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황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순식간에 위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철강사들은 신흥국 시장의 고부가가치 자동차용·건설용 등 철강 수출을 늘리는 한편 체계적인 동남아 철강 시장 공략을 위해 FTA(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인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기후에 적합한 차량용 강판과 건설용 후판 등을 공급하며 수출 확대에 한창이다. 지난 2022년부터 인도에 일관제 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투자 방안도 꾸준히 모색 중이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직후 LX 인터내셔널의 인도 냉연강판 생산법인 지분을 전량 인수한 바 있다.

현대제철 또한 인도에 철강 생산 법인을 세워 차량용 강판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수출·납품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공급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주요 고객사를 둔 배터리 업계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하반기 유럽 시장 회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해당 정책이 실적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배터리사들은 유럽 현지 생산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내년 가동을 목표로 ES

S(에너지저장장치)라인 전환 투자를 진행 중이다. 라인 전환이 이뤄지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로부터 받은 ES S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럽 지역으로 LFP ESS 배터리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SDI는 헝가리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 투자를 추진하며 유럽 고객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중순부터 헝가리 공장에 설비를 반입할 계획으로 올해 2분기 장비 공급 사전성 이후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재사들도 유럽 내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에코프로비엠은 연간 5만4000톤 규모의 헝가리 공장을 하반기 가동 예정이며 이를 통해 LFP 양극재 양산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역 보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동남아와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

내 기업들이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미국 시장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시장 다변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장 수출 감소로 인한 물량 및 매출 손실을 완전히 메우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인 만큼 국가 간 협상을 통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철강사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신흥국으로 대체하려면 상당한 판매량이 필요하지만 이미 중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만큼 결국 신흥국 시장 개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히 동남아는 인구 증가와 사회 인프라 수요 확대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4개월 끝다 13.8조 추경… ‘짊빔’ 대책으로 경기회복 요원

정치 혼선 속 가까스로 통과
야당 요구엔 한참 못 미쳐
‘2차 추경’ 대선 전 부상 조짐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집행에 들어간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200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으나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0조 원 안팎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하에서 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행과 최 전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는 탄핵 표적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정치적 난관 속에 올해 1회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됐다.

다만 벌써부터 각 분야 지원 여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야는 내수진작을 비롯해 산불 피해복구, 무역마찰·수출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해 왔다. 민간소비

등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인 데다 영남권 대형산불은 역대 화재를 통틀어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또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상쇄해 온 수출 전선에도 미국 발 관세전쟁 탓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짊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4주 뒤 들어설 차기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전에 공약의 일부로 내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이달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제시했다. 종전의 1.7%에서 1%포인트(p)나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요

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1% 미만의 ‘사실상 제자리 GDP(국내총생산)’을 제시한 국내외 기관이 이미 여럿이다. JP모건·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씨티그룹·하이투자증권·IM증권·ING그룹(0.8%), 캐피탈이코노믹스(0.9%) 등이다.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수·수출 동반 추락… “AI·중소기업 중심 산업 재편 시급”

성장률 -0.2%, 3분기 만에 역성장
김상봉 “산업 키우고 중기 지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수출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에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

한국은행은 최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



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당시 전망치인 0.2%보다 0.4%포인트(p)나 낮아졌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쳤던 만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지출이 줄어 들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투자에서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0.2% 줄어 부진이 이어졌다. 정부 소비도 건강

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 줄었다.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한 모습이다.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수출도 전망이 밝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정책을 본격화하며 ‘관세전쟁’의 여파가 5~6월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내수·수출 모두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월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1.5%)를 밑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인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산업 경쟁력 제고… 중기 육성해야”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해선 재정·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산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한 가운데 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투자 및 육성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기존 산업과 새롭게 부

상한 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력을 갖춘 금융권에서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 민간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자본과 설비를 갖춘 대기업보다는 기술은 갖췄으나 자본이나 생산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에 미온적이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인 방안만으로는 현재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